



러시아의 향후 정국 방향

러시아는 향후 정치적인 면에서 옐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과 통치권 유지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을 것이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의 진로는 정치권의 분열과 옐친의 보수·강경 노선 선회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박용석 / 산업연구원 동북아 연구실 책임연구원

최근 체첸 사태는 중앙과 지방간의 대립과 갈등이라는 러시아의 고질병을 주요 국제 문제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사건이 러시아의 향후 정국 방향과 옐친정부의 진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인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소연방 붕괴 이전인 1991년 6월에 러시아 최초의 민선 대통령에 당선되어 신생 러시아 연방을 이끌고 있는 옐친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지만 그때마다 특유의 돌파력과 끈기로 이를 잘 극복해왔다. 그러나 이번 체첸 사태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을 지켜 본 많은 러시아문제 전문가들은 한 때 국민적 영웅으로까지 존경받던 옐친의 권위와 도덕성이 이번 사태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고, 한 때 그의 지지 세력이었던 핵심 개혁파 인사들조차 그에게서 등을 돌릴 정도로 옐친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과거 러시아의 주요 국

내 문제 발생 때마다 옐친에 대해 지지 일변도의 태도를 취했던 주요 서방 국가들도 이번 체첸사태 해결에서 나타난 옐친정부의 강경·보수 성향을 이유로 향후 러시아의 개혁 정책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러한 옐친의 국내외적 이미지 실추때문에 크레믈린 내부에서조차 그가 1996년 6월로 예정된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 하차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심스러운 진단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옐친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국내외 여론 악화에 개의치 않고 이번 체첸 사태의 무력 해결이 궁극적으로 러시아 체제 이행기의 최대 과제인 새로운 정치 체제를 변형하는 경제 토대 위에 구축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변하면서까지 향후 국가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아울러 極右민족주의자를 비롯한 러시아의 일부 정치 세력들 사이

에서는 무력에 의한 체첸 사태 해결이 현재 러시아가 처한 어려운 정치·경제적 현실을 감안할 때 옐친정부가 택할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이었으며, 이는 강력한 국가와 지도자를 원하는 대다수 러시아 국민의 기대에도 부응하는 조치로 향후 러시아 국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옐친 대통령과 연방정부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개진되고 있다.

본고는 향후 러시아 연방의 장래에 대해 다양한 예측들이 제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선 최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해묵은 민족적 갈등과 경제 관할권 다툼이 원인이 된 체첸 사태 및 이를 기점으로 격화된 모스크바 쭉정과 간의 정치적 대립이 유발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제반 과장을 조망해 보고, 이를 근거로 향후 옐친 정권의 진로와 러시아의 정국 방향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 중앙과 지방의 갈등 치유 어려워져

우선 이번 체첸 사태가 몰고온 정치·경제적 과장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점은 향후 러시아의 민족 문제나 경제 관할권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간 대립과 반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는 약 140여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연방국가이고 따라서 과거 제정러시아 시대부터 러시아는 민족 문제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갈등 구조라는 불씨를 항

상 안고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전신이었던 제정러시아나 소연방은 강력한 중앙집권주의를 바탕으로 쭉민족의 분리주의나 지방의 권한 확대 기도에 대해 강력하게 응징을 되풀이해 온 결과, 러시아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 문제는 쉽게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러시아에서 민족 문제나 중앙과 지방간의 정치·경제적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출된 것은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민주화와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앙정부의 권위주의 색채가 점차 퇴색하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자 자연히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아울러 초기에는 주로 인종, 종교, 문화 등의 비경제적인 문제에 한정되었던 지방의 요구가 연방정부의 경제 자유화·분권화 주창을 계기로 점차 경제적인 문제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짐은 이미 1991년 소연방 시절의 연방조약 채택 및 1993년 러시아의 신연방 헌법 채택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 정치 민주화와 경제적 자율권의 확대에 러시아의 각 지방은 연방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획득하기 위해 천연 자원 등 모든 자신들의 물적 자원에 대한 독자적인 관할권 행사를 주장하였고 대외 거래나 사유화 방식 등 제반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연방의 통제와 간섭을 벗어나려 했다. 이러한 지방의 경제 관할권 확대 요구를 주도한 계층은 지방의 실력자로 부상한 舊공산 계열 관료, 국영 기업 관리자 및 이들과 결탁한 신흥 지방

자본가들이었다. 그러나 옐친은 1993년 9월 무력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동년 12월 신헌법을 채택하면서 이러한 지방의 요구를 대부분 무시하였다.

군사적 개입보다 정치·경제적 합의가 필요

그러나 옐친정부가 추진해 온 급진적인 시장경제 개혁은 결과적으로 중앙의 지방에 대한 경제적 간섭과 통제를 약화시켜 왔으며 특히, 옐친정부가 의회와의 전쟁으로 지방 문제에 대해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던 틈을 타 지방정부의 경제 관할권 요구의 강도는 더욱 높아져만 왔다. 특히 러시아인이 민족 구성에서 소수를 차지하는 지방의 경우, 지방정부는 자신들의 요구를 연방정부가 거부할 경우에는 연방 탈퇴라는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공공연히 자행해 왔다. 이번의 체첸 사태는 이러한 요구에 민족적·정치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군사적 해결이라는 불행한 사태로 발전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체첸 사태는 옐친정부와 러시아의 정치권에 향후 안정적인 연방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하나의 해묵은 숙제의 해결을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에 이미 러시아가 와 있다는 교훈을 주었지만 그 해결 방안으로 만족할만한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 이번 체첸 사태는 물리력 면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연방정부의 잠정적인 군사적 승리로 일단락되고, 러시아내 각 지

방정부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지녀 지방정부의 독자 노선 추구가 향후 잠정적으로 수그러드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특히 이슬람 문화권에 속한 호전적인 카프카즈 지방의 복잡한 민족 문제와 갈등 구조는 이미 이러한 군사적 해결 방식만으로는 치유하기 힘든 고질적인 문제라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체첸의 민족주의자들이 비록 정규전에서는 패했지만 활동 거점을 산악 지역으로 옮겨 장기 게릴라전을 피함으로써 러시아 연방정부에 대해 계속적인 저항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아울러 성격상 정치 문제로까지 비화되기 어려운 단순한 경제 관할권 확대와 관련한 지방의 요구 사항들은 자유 경제 체제 구축과 경제의 분권화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는 현 옐친정부의 입장에서는 개혁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당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쌍방간에 정치적·경제적 타협과 이해에 기초하지 않은 이번 체첸에서와 같은 물리력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양자의 역학 관계 변화와 같은 사소한 문제로서도 항상 그 분쟁의 불씨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가 없다.

지리한 정치 소모전 재연 우려 높아

이번 체첸 사태가 유발한 또 하나의 정치적 파장은 그간 지리하게 소모전을 계속해 온 옐친정부와 의회간 보수와 개혁의 대립을 더욱

장기화시키고 개혁 세력의 내부 분열도 가속화 시킴으로써 그 동안 살얼음판을 걸어 온 러시아의 정정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옐친 대통령은 1993년 9월 자신의 개혁 정책에 반대만을 일삼아 온 보수 세력의 결집체인 의회를 무력으로 해산하고 이어 동년 12월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현저하게 강화된 신헌법을 국민 투표에 부쳐 통과시킴으로써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듯 했으나, 신헌법 채택과 동시에 실시된 총선에서 보수 세력과 민족주의자들이 다시 의회를 장악함으로써 그의 의도는 달성되지 못했다. 그러나 옐친 대통령은 1994년 4월 28일 원내 제 2당인 자유민주당의 지리노프스키 당수 등 반옐친 정치 지도자들과 차기 대선과 총선이 실시되는 1996년까지 모든 전쟁을 중단하기로 한 '사회 화합을 위한 시민 협정'을 체결하여 야당의 대정부 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이후 러시아의 정국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체첸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의 지역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옐친과는 상이한 입장을 표방해 온 농민당, 시민연합 등 의회 보수 세력이 다시 반옐친 공세의 포문을 열었고, 설상가상으로 과거 옐친의 강력한 정치적 지지 기반이었던 개혁 성향의 자파 의원 대다수도 옐친의 보수 성향과 강경주의를 이유로 그와의 결별을 선언함으로써 러시아의 정국은 1994년 초의 불안정한 상황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다. 현재 체첸 사태 해결에 있어서 옐친의 방식을 지지하는 인사로는 극우주의자인 자유민

주당의 당수 지리노프스키와 크레믈린의 보수 강경 성향의 옐친 측근들 뿐이다.

경제 개혁 결실에 찬물-서방의 금융 지원과 투자 감소세로

정치 안정의 저해와 더불어 체첸 사태가 파급하는 경제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당장 이번 전쟁에 쓰인 엄청난 군사비는 러시아 경제의 병폐로 지적되는 인플레이션 재연과 정부의 재정 적자가 확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 경제는 긴축 재정에 주안점을 둔 거시 경제 정책이 주요해 한동안 안정되는 듯 했다. 1994년 월간 물가 상승률은 6 개월 이상 한자리 숫자에서 진정되었으며, 민간 부문의 약진으로 모처럼만에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체첸 사태가 발발한 12월에는 월간 물가가 16% 이상 치솟고 과다한 군사비 지출로 정부의 재정 상황도 악화되었다. 러시아의 유력 일간지 이즈베스찌야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체첸 사태에 러시아가 투입한 戰費는 약 4조 루블(11억 달러)로 러시아 GDP의 약 1%에 달하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전비가 소요될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한다.

과다한 군사비 지출과 인플레이션의 재연보다 러시아의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경제적 악재는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금융 지원 보류와 외국인 투자의 감소이다. IMF 등 국제 금융 기관은 체첸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 정부의 경

제 개혁 의지와 차관 조건 이행의 성실성 여부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고려중이었던 총 62억 5천만 달러의 원조금 제공을 잠정 보류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체첸 사태로 인한 러시아의 정정 불안과 옐친 정권의 보수·강경 노선 표명은 외국인의 러시아내 사업 환경을 악화시키고 이들의 투자 마인드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러시아는 올해에만 차관 상환금과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해 최소 130억 달러 이상의 해외 차입금을 필요로 하고 있고, 침체된 산업 생산 회복과 부족한 산업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약 5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해외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없으면 올해 러시아 정부가 설정한 GDP의 7.8% 이내의 재정 적자, 국민 소득 5~7% 감소, 산업 생산 8~12% 감소 등의 경제 목표는 달성되기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옐친의 보수·강경 색채 짙어질 듯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 러시아의 정국은 중앙과 지방간의 해묵은 갈등이 폭발한 체첸 사태라는 악재로 정치권이 분열되었고 시장 경제 개혁에도 악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러시아의 講정과와는 1996년의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복잡한 이해 관계에 따라 기민하게 이합 집산을 계속하고 있어 향후 두번의 선거를 통한 세력 재편이 현재로서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혼미

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앞에서 살펴본 제반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사안에 주목하면 향후 러시아의 정치적·경제적 진로에 대한 희미한 가닥을 잡을 수 있다.

향후 러시아의 정국과 정치권의 향배에 관한 전망 중 가장 현실감이 있는 지적은 러시아의 講정과간의 이합 집산이 계속되고 옐친의 권위와 위신이 타격을 받았지만 옐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과 통치권 유지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는 현재 옐친을 비판하는 정치 지도자나 정치 세력은 많지만 러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현안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는 인물이나 집단이 옐친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으며, 더욱이 실천력 면에서는 그 누구도 현 대통령인 옐친을 능가하는 인물이 없다는 점이다.

옐친 대통령은 비록 최근의 체첸 사태를 계기로 진보 성향의 개혁파들로부터 등돌림을 당하는 등 정치적 입지가 축소되고 있으나 그의 정적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합법적으로 옐친을 권좌에서 끌어 내릴만한 수단이 없으며 또한 그러한 극단적인 방법을 취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따라서 현재 서방의 열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군부 쿠데타나 특정 집단에 의한 옐친 실각설은 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체첸 사태 해결에서 나타난 정부의 무능함과 위기 관리 능력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옐친은 그 특유의 독심과 노련미를 발휘 정부의 요직에 있는 인물들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어 향후 크레믈린의

권좌를 최소한 그의 임기까지는 무리없이 사수할 것으로 보인다.

옐친의 통치권 유지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사항은 최근 급속하게 보수·강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옐친의 보수·강경 노선으로의 선회는 이미 체첸 사태 이전에도 각료 임명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옐친은 올해 11월 개혁 성향의 쇼힌 경제장관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야신 대통령실 보좌관을 임명하고 보수 성향의 판스코프를 재무장관에, 농민당 출신의 보수파 하원위원 나자르추크를 농업장관에 임명하는 등 각료 인선에서 이미 보수·강경파를 중용하였다. 이러한 각료 인선 결과 현재 핵심 각료중에 옐친과 초반부터 호흡을 같이해 온 개혁파는 추바이스 부총리 하나만이 남게되었다. 아울러 대통령 소속 보좌진, 국가안보회의 위원 및 군인 인사에서 나타난 옐친의 보수 성향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옐친은 현재 실질적인 국가 최고 통치 기구로 평가되는 국가안보회의 위원을 거의 대부분 보수·강경파 인물로 채워놓고 있으며, 대통령 경호실과 비서실에도 보수파를 중용하고 있다. 특히 군인 인사에 있어서는 체첸 사태시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보로비요프 지상군 부사령관을 비롯하여 콘트라체프 등 3명의 국방차관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측근을 기용한 바 있다. 이러한 옐친의 보수·강경화는 일차적으로 자신을 배반한 개혁파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1996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파 및 중도파를 회

유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옐친의 최근 보수 성향 선회로 러시아의 대외 정책, 민족 정책 등은 전례 없이 강경 색채를 띠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적인 측면에서 향후 러시아의 진로는 정치권의 분열과 옐친의 보수·강경 노선 선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시장 경제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그 정책의 기조는 재정 긴축과 경쟁 원리 확대에 두어질 전망이다. 다만 옐친의 정치색이 지나치게 보수화될 경우 국영 기업의 민영화와 같은 소유 제도의 개혁이 약간 속도를 늦출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경제 개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시장 경제 개혁의 가속화 이외에는 침체된 러시아 경제를 회생시킬 대안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체의 힘만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한 러시아의 경제 현실상 서방 및 국제 금융 기구들이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급진적인 시장 경제 개혁 추진을 거부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경제의 자유화·개방화에 의한 개혁만이 러시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시대의 대세라는 생각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